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지분 20% 이상 상장사에 기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아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쪼개고 사업 부문별 매출도 쪼개서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반도체 대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형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